

국제사회 보훈외교 역할 강화...생애 마지막까지 최상 예우

진한다.

2.보훈시설 활용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전국에 산재한 보훈기념시설(2,219개소), 기념관(94개소), 국립묘지(10개소) 등을 국민이 독립·호국·민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훈기념시설법을 제정해 독립·호국에 한정된 명칭인 현충시설을 민주까지 포괄하는 보훈기념시설로 변경하고 4·19, 5·18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건립·관리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

현재 건립중인 임시정부기념관은 임정요인 한국일에 맞춰 오는 11월 23일 개관하며,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과 서울 용산 효창공원 독립 기념공간화, 세종 국가보훈광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념관·국립묘지 등을 통한 선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내 손안의 기념관 서비스'도 전국 독립·호국 관련 94개 기념

관으로 확장한다.

3. 국제사회에서 보훈의 역할 강화
올해 12월 참전국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참전국 보훈부장관 등을 초청하는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지난해 개최됐던 22개 유엔 참전국 대표회의 공동선언문의 실행 및 협력방안, 정전 70주년 계기 공동사업 추진 등을 논의한다.

미래세대와 6·25전쟁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유엔 참전용사의 증언과 참전기록 등을 활용한 참전국별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참전국 역사교사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 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1.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지난 4년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시책을 대폭 확대해온데 이어 국가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대상을 전몰·순직군경 유족 12만1,310명까지 확대하고, 미래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발굴, 국민과 공유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올해 중 독립유공자 유해 3위가 봉환될 예정이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중위소득 50%이하, 1만4,992명)로 확대하고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장례물품·인력을 지원한다. 현재 대상별로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장례 및 안장 지원 제도를 정비해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추진한다.

2. 마지막 안식처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적기 확충으로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해 예우한다.

신규로 △국립연천현충원(5만기, '25년 개원 예정) △국립제주호국원(1만기, 올해 12월 개원)을 건립하며 기존 기존묘지 확충은 △대전현충원

(4만9,000기, 올해 4월) △이천(5만기, 착공) △괴산(2만기) 임실(2만기) 영천(2만5,000기) 4·19(600기) 등은 설계를 시작한다.

국립묘지 외 안장된 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합동묘역(전국 59개소)에 대해 신청을 받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해 국립묘지에 준하여 품격 있게 운영한다.

3. 국민에게 존경받는 보훈단체상 정립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현재의 사업 실태조사와 함께 수익사업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적법한 사업구조를 유도해, 대명사업 등 문제·부실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소수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단체별 맞춤형 정관 개정을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 주제를 설정해 각급 학교, 자원봉사단체와 협업하는 등 선양활동도 장려한다.

